

중국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김재철 (기톨릭대학교 교수)

국력의 증대와 함께 중국은 동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동아시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다자주의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중국으로 하여금 아세안이 추진하던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작용했다. 지역협력에 대한 중국의 적극성은 동아시아정상회의 출범을 조기에 실현한 데서 가장 단적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적극성은 중국이 지역협력의 주도권을 장악할 가능성을 가시화시킴으로써 지역 국가의 대응을 촉발시켰는데,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개된 국가 간의 치열한 상호작용은 지역협력을 가속화시키는데 기여한 측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으로 이어짐으로써 지역협력의 진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지역 국가 간의 경쟁으로 인해 동아시아에는 서로 중첩적인 지역협력의 틀(framework)이 중첩되어 경쟁하는 현상이 초래되었다.

동아시아정상회의가 아세안이 회의개최와 구성원 선정의 권한을 독점하는 “아세안+6”의 기제로 변질된 이후 지역협력과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중국의 열의는 급속하게 감퇴했고, 소지역 협력과 양자 차원의 협력으로 그 초점이 실질적으로 이동했다. 중국의 유보적 태도는, 최근 결정된 미국의 참가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정상회의가 단기간에 동아시아 지역 협력의 핵심적 협력기제로 발전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목 차

1.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질서
2. 동아시아와 다자주의에 대한 재평가
 - 가. 동아시아의 발견
 - 나. 다자주의 수용
 - 다. 의구심 해소와 영향력 증대
3. 동아시아 지역협력 정책의 전개
4. 중국의 정책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5. 한국의 선택

1.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질서

- 중국의 부상이 국제질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수용되는 사실이 되었음. 세계금융위기를 계기로 중국의 국제적 지위가 더욱 제고되면서 중국의 대외정책의 향방이 국제질서에 영향을 끼치는 현상은 더욱 분명해짐.
-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은 중국이 위치한 지역인 동아시아에서 가장 현저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부상이 동아시아 질서, 특히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끼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성을 찾을 수 있음.
- 지난 10여 년간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대한 중국의 정책은 변화를 경험했는데,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대한 중국의 정책과 그 파급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지역과 다자주의에 대한 중국의 평가뿐 아니라 중국의 정책에 대한 지역 국가의 대응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검토는 동아시아에서 전개되는 지역협력의 동학을 밝히는 데 기여할 것임.

2. 동아시아와 다자주의에 대한 재평가

가. 동아시아의 발견

- 중국은 지리적으로 동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지만 중국의 전략적 사고 속에서 동아시아에 대한 인식이 싹트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현상임. (이 절의 논의는 부분적으로 김재철 『중국의 외교 전략과 국제질서』 제4장에서 끌어 왔음.)
- 냉전기 중국은 미국 및 소련과의 관계를 중심에 놓고 주변 국가들에 대한 정책은 강대국과의 관계라는 보다 중요한 고려에 종속시켜 설정하는 등 자신을 동아시아 국가로 규정하기보다 초강대국과의 관계에 대외정책의 초점을 집중시킴.
- 중국의 급속한 성장은 이러한 상황에 변화를 가져옴. 국력의 증대와 함께 중국에서는 대외전략과 관련하여 동아시아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함.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주도권을 장악하지 않고는 세계적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자각임.

- 이러한 인식과 함께 중국은 점차 자신을 동아시아 국가로 규정하고 지역 차원의 정책을 추구하기 시작함. 그 시작은 경제위기가 동아시아를 강타한 1990년대 후반으로 이 시기 중국은 아시아 지역에 대한 “책임”과 “동아시아 의식”을 거론하기 시작함.
- 이후 동아시아 정책은 중국이 추진한 주변지역 정책과 선린우호 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는 등 중국 대외정책의 주요 초점으로 부상함.

나. 다자주의 수용

-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대한 중국의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자주의에 대한 중국의 평가에 나타난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냉전기 중국은 국제기구나 레짐 같은 다자적 장치에 대해 강대국의 이익을 강요하는 강대국의 무기라는 의구심을 보임. 기본적으로 중국은 다자주의가 중국이 중시하는 주권원칙과 상충한다는 인식을 지님.
-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개혁개방기 들어 중국은 국제사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창출하고 또 경제발전에 필요한 국제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에서 국제기구에 가입하기 시작함.
-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다자주의에 대한 중국의 의미 있는 참여는 1991년 APEC 가입에서부터 시작됨. 이 당시 중국의 APEC 가입은 다자주의의 원칙이나 가치를 수용한 결과이기보다 APEC이 급속하게 확대되던 흐름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음. 이러한 사실은 APEC에 참여한 후 중국의 관심이 다자주의가 지나치게 빠르게 확대됨으로써 개별국가의 주권을 제약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주어진다는 사실에서 단적으로 확인됨.
- 1990년대 중반을 계기로 다자주의에 대한 중국의 평가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함. 그동안 강대국의 무기로 간주되었던 다자주의가 중국이 추구하는 미국의 패권적 행위의 제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가 제기됨. 이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다양한 다자기구에의 참여를 통해 집적한 경험과 자신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중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경험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다자주의를 적극 추구

**이러한 정책변화는
다자주의가 중국의
국익을 실현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는
전략적·실용적 판단의
반영**

- 이후 중국은 다자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변화가 중국으로 하여금 당시 진행되고 있던 동아시아 지역협력에도 적극성을 보이도록 작용함.
- 다자주의에 대한 중국의 정책변화는 다자주의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 결과이기보다는 다자주의가 중국의 국익을 실현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는 전략적 또는 실용적 판단을 반영함. 이를 반영하듯 중국은 자국의 주권을 제약할 수 있는 강제력을 지니지 않거나 자신이 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다자적 틀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임하는 경향을 보임. 이러한 사실은 중국이 아세안(ASEAN)+3와 상하이 협력기구(SCO)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데서 드러나는데, 이 기구들은 모두가 강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또 미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공통성을 지님. (반면에 중국이 적극성을 보이는 또 하나의 다자적 협의체인 6자회담은 미국을 포함하고 있지만 중국이 개최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등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다. 의구심 해소와 영향력 증대

- 중국이 동아시아에 관심을 보이고 또 동아시아에서 진행되는 다자협력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고려가 중요하게 작용함.
- 한편으로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자신에 대한 의구심과 경계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함. 동남아 국가들은 아세안이라는 틀을 통해 다자적 차원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려 들었는데, 중국은 동남아 국가에서 “중국위협론”이 제기되고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세안의 노력에 호응함.
- 동시에 중국은 이처럼 자신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 지역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제고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함. 아세안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은 동남아 국가로 하여금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추구하던 반중연합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동남아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시킴으로써 미국이 유지해온 주도권을 약화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이는 다시 중국이 중시하는 세계질서의 다극화에 기여할 것으로 간주됨. 이러한 고려에서 중국은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온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려 들.

- 이러한 두 개의 고려는 일견 상충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후 지역협력에 대한 중국의 정책에 반영됨.

3. 동아시아 지역협력 정책의 전개

- 동아시아와 다자주의에 대한 평가가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차원의 협력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음.
-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대한 중국의 적극성은 동남아 국가에 대한 공세로 표출되기 시작함. 2000년 아세안-중국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주룽지(朱鎔基) 총리가 아세안에 대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제의함. 주 총리의 제의는 당시 가시화되었던 중국의 WTO 가입이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서 중국위협론을 확산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아세안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려는 의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음.
-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대한 중국의 공세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개최문제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남. 아세안+3 국가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던 동아시아정상회의의 구상은 아세안+3 국가의 고위관료로 구성된 동아시아 연구그룹(EASG)에 의해 장기적인 과제로 미루어진 바 있음. (동아시아정상회의의 개최에 대한 중국의 적극성과 이에 대한 지역 국가들의 대응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Jae Cheol Kim, "Politics of Regionalism in East Asia: The Case of the East Asia Summit," *Asian Perspective Forthcoming*을 참조.)
-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내에서 주도권 확대를 추구하던 말레이시아는 동아시아정상회의의 조기개최를 추진함. 전직수상 마 하티르가 동아시아 국가들로만 구성된 조직을 선호했던 말레이시아는 아세안+3 국가들로 동아시아정상회의를 조기에 출범시킬 것을 제의함.
- 중국은 아세안 국가의 합의 없이 추진된 동아시아정상회의의 조기개최를 적극적으로 지지함. 대표적으로 중국은 2004년 6월 칭다오(靑島)에서 개최된 아세안-중국 외교장관회의와 7월 자카르타에서 개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대한 중국의 공세는
동아시아정상회의
개최문제에서 분명히
드러남**

**중국은 개방적이고
포괄적 지역주의
원칙을 천명하지만
동아시아정상회의에
비해 아세안+3를 선호**

최된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 등에서 동아시아정상회의의 조기개최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중국은 아세안+3를 동아시아정상회의로 전환시키는 것이 지역협력에 대한 자국의 주도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함. 아세안+3가 아세안이 회의개최와 의제설정을 독점하는 등 아세안에 의해 주도되는 데 반해 동아시아정상회의는 13개 구성 국가 모두가 회의를 개최하고 의제를 설정할 권한을 갖는 등 동등한 자격에서 참여할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함.
- 아울러 동아시아정상회의 구상에 미국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주도권 강화에 대한 중국의 기대를 제고시킴. 중국은 동아시아 국가들, 특히 자국이 보다 큰 역할을 할 때가 왔다는 인식을 지님.
- 중국의 기대와 희망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정상회의는 일본의 견제와 인도네시아·싱가포르 등 일부 아세안 국가의 균형정책으로 인해 호주와 인도 등이 참여하고 아울러 주도권 또한 아세안이 계속해서 장악하는 형태로 귀결됨. 중국이 동아시아정상회의의 소집과 관련하여 자신의 선호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지도력에 대한 중국의 기대와 추구가 지나치게 성급한 것이었음을 보여줌.
- 동아시아정상회의가 아세안이 회의개최와 구성원 선정의 권한을 독점하는 “아세안+6”의 기제로 변질된 이후 지역협력과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중국의 열의는 급속하게 감퇴함. 중국은 동아시아정상회의가 아세안+3를 대체하는 데 반대하고 아세안+3가 지역협력을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정책을 선회함.
- 중국은 동아시아정상회의에 비해 아세안+3를 선호하지만, 호주 및 인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공개적으로 동아시아정상회의를 배척하려 들지도 않음. 공식적으로는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지역주의 원칙을 지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포괄적인 동아시아정상회의가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아세안+3를 약화시키는 것을 방지하려 노력함.
- 중국은 기존 틀을 선호한다는 입장임. 아울러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관한 중국의 논의는 동아시아정상회의의 문제 자체를 논의 대상에서 배제하기도 함. 아세안+6의 형태를 띤 동아시아정상회의가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촉진시키기보다 지체시킬 것이라는 판단을 반영함.

- 이러한 중국의 정책은 동아시아에서 다양한 지역협력의 틀이 혼재하는 현상(multi-layered approach)을 초래하는 데 기여함. 중국은 이러한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단기간 내에 지역협력과 공동체 실현을 위한 단일의 지역기구를 출범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함.
- 중국은 지역협력의 과정(process)이 지속되도록 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둠. 과정이 지속될 경우 중국위협론이 제기되거나 지역의 불안정이 초래되는 것을 막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함.
- 이처럼 중국은 한편으로 아세안+3를 지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동아시아정상회의의 조기 출범을 지지하도록 작용했던 요인 가운데 하나인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협력의 한계를 계속해서 인식함. 중국은 지역협력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중-일 간의 협력, 특히 중-일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인식함. 한-중-일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중국의 인식은 최근에 제기된 한-중-일 간 공동통화 창출제안(A3)에서도 표명된 바 있음.
- 동아시아 공동체는 장기적인 목표로 규정되며 또 점진적 방식을 통해 달성될 것이라는 입장임. 다시 말해 동아시아 공동체의 실현은 장기적이고 또 곡절이 많은 과정이 될 것이라고 판단함. 아울러 이렇게 실현될 동아시아 공동체는 경제협력 위주의 공동체가 될 것이고, 협력의 수준 또한 EU보다 낮을 것이라고 인식함.
- 동아시아 지역정책의 실질적인 초점은 다시 양자관계로 이행됨. 그 제1의 초점은 아세안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집중됨. ACFTA 출범 및 100억 달러 규모의 아세안인프라펀드 출범 등이 그 구체적 표현임.
- 이는 “시간은 중국편”이라는 자신감을 반영함. 지금 차선을 실현하기 위해 타협하기보다 기다리면 최선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반영함.
- 호주나 일본의 지역협력구상 등 새로운 제안에 대해 중국은 긴 침묵을 유지함. 일본 하토야마정부의 동아시아공동체 제안에 대해 중국은 “이성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이는 중국이 여전히 그 진의를 탐색하는 단계에 있으며 일본 민주당 정부가 이를 추진할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하토야마가 난징을 방문하고 후진타오가 히로시마를 방문”하는 구상이

**동아시아 공동체와
관련하여 차선을 위해
지금 타협하기보다
기다려서 최선을
실현하겠다는 입장**

**중국의 적극성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노력을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그 진전을
방해하는 상충적
기능을 함**

좌절됨에 따라 중국은 자신의 “이성적” 대응이 옳았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음. 후텐마 기지 이전문제에 대한 하토야마정부의 최종적인 결정은 이러한 판단을 더욱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진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뒤늦은 각성을 함. 이러한 평가는 동아시아정상회의 출범을 통해 체득했으며 오바마 행정부 들어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다시 제고되면서 더욱 강화됨. 아세안과의 대화관계 수립 및 동아시아정상회의 참여 등은 동아시아 국가와 중국 간의 관계가 급속하게 증대되는 것을 제어하려는 미국의 시도로 인식됨.
- 중국은 개방성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동아시아 협력은 지리적으로 동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들만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선호를 계속해서 견지함.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회원국 숫자가 적은 기제에서 시작하여 토대를 공고히 한 후 회원국 숫자가 많은 기제로 확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논리를 제시함. 실질적으로는 미국과 그 우방국이 참여할 경우 자신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함.

4. 중국의 정책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 중국의 적극성은 동아시아에서 지역협력의 움직임을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지역협력의 진전을 방해하는 일견 상충적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함.
- 한편으로 아세안에 대한 중국의 공세는 지역협력에 소극적이었던 일본의 경쟁심을 촉발시킴으로써 지역협력의 움직임을 활성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짐. 일본은 중국의 적극성을 자신이 누려온 지역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로 간주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함.
- 이러한 경쟁심이 일본으로 하여금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작용함. 대표적으로 중국이 아세안과 2010년까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데 합의한 직후인 2002년 초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아세안 5개국을 순방하여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제의함. 아울러 일본은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브루나이, 그리고 인도네시아 등과 순차적으로 일본판 자유무역협정인 경제연대협

정(EPA)을 체결함.

- 이러한 일본의 공세는 다시 한국으로 하여금 아세안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도록 작용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연쇄적으로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함. 동시에 중국으로 하여금 동아시아정상회의의 조기창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도록 작용하는 등 지역협력의 움직임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함.
- 반면에 중국의 적극성은 일본으로 하여금 중국이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주안점을 두도록 작용함으로써 지역협력을 둘러싼 경쟁도 초래함.
- 일본은 동아시아정상회의의 출범과 관련하여 중국이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집중시킴. 일본은 미국을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좌절된 후 호주와 인도 등을 포함시키고 제2차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좌절시키는 등 동아시아정상회의의 출범이 중국의 영향력 강화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는 데 전력함.
- 중국이 동아시아정상회의에 대한 열의를 접은 후에도 일본은 동아시아정상회의의 구성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CEPEA) 구상을 제기하는 등 동아시아정상회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옴.
- 아세안 국가들 또한 지역협력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 시도함. 아세안의 최대 관심은 지역협력의 주도권/중심성(centrality)을 유지하는 데 집중됨. 이에 따라 아세안 국가들은 인도와 호주를 동아시아정상회의에 포함시키는 데 동의함.
- 동아시아 지역협력은 지역의식이나 공동체 의식을 창출하기보다 주권, 주도권, 균형, 경쟁 등에 의해 규정되는 특징을 노정함. 중국이 지역협력을 자국의 영향력 강화라는 시각에서 접근한 것처럼 일본 또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 방지에 초점을 집중시킴.
- 중국이 아세안+3를 지지하고 일본이 동아시아정상회의를 지지함에 따라 가까운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지역협력을 위한 다양한 틀이 혼재하는 현상에 의미 있는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음. 비록 최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동아시아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

**동아시아에서 전개되는
협력은 다자보다 양자
차원에서 진행될
가능성 있음**

동아시아 국가들의 새로운 질서 모색 과정에서 지역협력은 중요한 대안으로 계속 검토될 것임

졌지만 지역 강대국 중국의 소극성은 동아시아정상회의를 활성화시키는 데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개되는 협력은 실질적으로 지역차원의 다자적 협력보다 FTA와 같은 양자차원에서 전개되는 협력에 의해 주도될 가능성이 있음.

5. 한국의 선택

- 동아시아에서 지역협력을 위한 다양한 기제가 경쟁함에 따라 지역협력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가능성은 크지 않음. 미국의 동아시아정상회의 참가가 가시권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망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제기될 가능성이 높음. 무엇보다도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구조적 변화가 동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지역협력을 추진하도록 작용할 것임. 미국의 국력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중국의 국력이 증대되는 현실 속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새로운 질서를 모색할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동아시아 지역협력은 중요한 대안으로 계속해서 제기될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상황에 대한 우리의 대응과 관련하여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 대안을 상정할 수 있음.
- 첫째, 지역 강대국들과 경쟁적으로 아세안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현재의 정책을 유지하는 대안임. 중국과 일본이 지역협력을 위한 서로 다른 틀을 선호하고 아세안이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 중-일 경쟁을 활용하는 상황에서 아세안과의 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에게 불가피한 선택으로 다가옴.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중국 및 일본과 맞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둘째,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을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포함시키도록 설득하는 대안임. 중국이 미국이 참여하는 지역협력을 수용할 경우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둘러싼 많은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음.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을 지역협력에 포함시키도록 설득하는 것은 동아시아에서 중-미관계를 증진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음. 반면에 과연 중국이 동의할 것인가라는 중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아울러 미국이 참여할 경우 지역협력은 동아시아 차원보다 아시아-태평양 차원의 협력이 될 가능성이 큰데, 이러한 상황이 전개될 경우 우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셋째, 역내 국가 중심의 지역협력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이에 대한 역외국가의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병행시키는 대안임. 동아시아 지역협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중국과 일본 간의 협력이 불가결한데 이를 위해 한국이 주도적으로 타협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협력의 움직임을 주도할 필요성이 있음. 구체적으로 중국이 강조하는 아세안+3 중심의 공동의 이익에 근거한 협력과 일본이 강조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 중심의 공동의 규범을 추구하는 협력을 조합시켜 “공동의 이익과 동등한 정도로 보편적 규범과 가치도 중시하는 아세안+3”를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주요 통로로 채택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동아시아정상회의는 동아시아 지역 국가와 역외 국가(아세안+3 국가와 미국, 러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간의 대화와 협력을 위한 포럼으로 설정함.
- 동 대안은 지역 국가만의 협력을 추구하는 중국과 규범 및 가치를 중시하는 일본의 이익을 조화시킬 수 있음. 아울러 공동의 가치와 규범에 대한 합의를 통해 중국으로 하여금 지역 국가의 우려를 인식하고 수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마지막으로 아세안+3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협력은 상대적으로 한국의 역할과 영향력 제고에 상대적으로 (동아시아정상회의, 아세안+8, Asia-Pacific concert of Powers 등에 비해) 유리하게 작용함. 반면에 과연 일본과 중국이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음.
- 미국의 동아시아정상회의 참가로 아세안+3와 동아시아정상회의 간의 분업을 새롭게 설정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하나의 대안으로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임.

**아세안과의 관계강화,
중국의 대미설득 유도,
아세안+3를 공동이익과
보편적 규범을 토대로
발전시키는 세 가지
대안을 한국의
대응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572 (697-120)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5-651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 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